

이재명 대표 17일 출석...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 촉각

8월엔 바로 영장실질심사, 9월엔 체포안 표결 '방탄 논란' 불가피 민주, 혁신안 놓고 파열음...호남 정치권 "다수 의원 경선 불이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차 커져가고 있어 이 대표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호남 정치권도 민주당 내부 역학구조의 변화는 물론 혁신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 '회기 조개기'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공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

작된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되고 있어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 기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회기 조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나아가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용에다 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총과 오는 28일부터 이를 동안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의 혁신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놓고 친명-비명계 간의 정면충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선 "전당대회 1인 1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상식"이라며 혁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는 혁신위의 혁신안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시키고, 당내 시스템 공천제를 흔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놓고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과 의원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내는 등 집단 반발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며 숙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역학구조 변화와 혁신안 처리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의 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강화안이 현실화된다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 혁신위의 현역 의원 페널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남지역 도 의원은 "혁신안의 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방안을 보면 불출마 의원들을 모수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많게는 30~40명 정도가 모호한 기준의 평가에 의해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혁신안은 결코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친명을 자처하는 일부 의원들과 입지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와 혁신안 처리 문제가 호남지역 총선 지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내년 총선 구도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오염수 저지 총괄대책위 발대식

규탄대회·천막농성 등 활동 전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지역별 총괄대책위 발대식을 열고 적극적인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원식 당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이용빈 광주 총괄대책위원장, 윤영덕, 이형석,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시당 대책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후쿠시마 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당원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당 총괄대책위원회는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별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전남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을 비롯,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적극적인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총괄대책위는 당내에 있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원내 주요 상임위원회 및 각 사·도당과 연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됐다.

우 상임위원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당원 특강에서 "한번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고,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도 않은 만큼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위험성, IAEA의 면피보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실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발대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개최와 지역별 천막농성 진행 등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미일, 매년 정상회의·공동훈련 개최"

日 언론 "대북 결속 강화"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별도의 정상회의를 틀을 만들어 결속력을 과시하고, 역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서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이를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람 이매뉴얼 주미 일본대사도 전날 일본 언론 취재진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3국이 공동의 원칙으로 결속하고 관여해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 협의라고 못 박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는데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첫 정례 행사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3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협의를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의의 간격 등에 대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최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기 한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방위 협력·공동 군사훈련·정보 공유·사이버 안보와 경제안보 협력 등의 방침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했지만, 정례적인 군사 훈련은 실시하지 않아 왔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역지력과 대처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조기에 시작하고, 중국에 대항해 반도체 등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증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목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